

월요광장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거는 기대



이 상 먼
광주대 교수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 중의 하나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사회적경제는 수익, 효율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협력, 호혜,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시스템이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사람이 기대를 걸고 있다.

사회적경제 체제는 호혜정신, 자율운영, 협치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지역에 기반을 둔다는 것이다. 즉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부의 유출을 막는 자립형 선순환 경제시스템이다. 그래서 글로벌경제에 편입될 수 없는 취약계층, 소외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해 시장과 정부의 자원 동원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던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지

역 기반 사회적경제 체제에서는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소비 욕구가 대기업에 의해 왜곡되지 않고 사용까지 중심의 소비구조로 전환시킬 수 있다.

같은 기업이라도 시장경제 기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행태는 큰 차이가 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지역경제와 무관하게 성장을 추구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지역 주민 고용, 생산요소 지역화, 부의 유출 방지를 위한 네트워킹 활성화, 지역공동체 복원 등 지역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의 성장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복지에 크게 기여한다.

지금까지 시장경제하에서의 세계화 및 중앙집권적 경제질서는 주민생활과는 관계없이 기업의 이윤추구와 국가의 통제에 유지된다. 세계화는 공동체, 지역으로 부터 경제활동에 대한 결정권, 선택권을 빼앗아 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세계화로 빼앗긴 지역주권을 찾는 지역화 작업이기도 하다.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할 때 확립된다. 그런데 지역에서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권이 지역에 있지 않고, 알지 못하는 존재에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위함하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특히 지난 고도성장

과정에서 성장 혜택을 입기보다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며 자생력을 잃은 우리지역에 더욱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갖는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 법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조성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사회적경제가 육성, 확산되고 있다. 주민 주도나 아닌 정부 지원하의 사회적경제는 그만큼 취약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핵심리더를 중심으로 지역문제를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의 자발성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 역량강화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차적인 관건이다. 그러나 지난 불균형 고도성장 과정에서 지역의 인적 자원은 고갈되어, 주민들이 위기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더라도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율, 자립적인 발전의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주체적인 역량

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일단 주민주도 체제를 갖추기 위한 과정이라는 인식하에 주민주도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을 제고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직접 주도가보다는 지원하는 주체로서, 지원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각종 교육과 훈련, 상호학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위기를 각성할 수 있도록 자극하여 주민주권을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적 기업 및 중간지원 기구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연대 및 자기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지자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정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즉 자립형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는 주민주도 거버넌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지방정책의 격차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체계구축 노력도 필요하다. 또 법안에 명시된 것처럼 각 지자체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 지원 방안을 찾는 데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양형, 엄정과 온정 사이의 고민



정 원 석
광주지검 검사

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오히려 양형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왜냐하면 벌금 10만원의 차이도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차이이기 때문이다. 일용노동으로 근근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피의자라면 벌금을 마련하지 못해 얼마나 전전긍긍할까.

사건을 처리해 오면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피의자의 눈물을 수도 없이 보다 보니,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양형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사로서 죄를 범한 사람의 혐의를 명백히 입증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므로

피의자 개인의 사정만을 들어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검사로서의 업무는 엄정과 온정 사이의 수많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오기 전 근무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다각도의 수사를 통해 여죄까지 밝혀내어 A를 구속하였다. A는 범죄 전력도 전혀 없던 직장인이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몹시 불안에 떨었다. 주임검사로서 A를 조사하면서 죄질한 A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A와 그 배우자를 면담하고 A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A의 현재 사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청하여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A에게 유리한 정황은 최대한 법원에 설명하고 검사 구형에 반영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온 후에 A로부터 연락이 왔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어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필자로서는 A가 자신의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하였을 뿐인데 A는 집행유예의 결과로 주임검사의 선처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그 연락을 받고 보니 검사 생활 동안 양형으로 고민한 나날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고, 검사로서의 당연한 책무임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오히려 A의 감사 인사는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한 번 더 피의자의 입장에서 고민해 달라는 국민의 요청이자 가르침이었다.

검사로서의 근무할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엄정과 온정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라는 A의 가르침은 잊지 못할 듯하다.

社說

‘성완중 리스트’ 검찰 수사 국민이 보고 있다

‘성완중 리스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메모가 발견되면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성완중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보수층에선 분위기가 그렇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정 사상 조유의 뇌물사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고 있다.

공개된 유성 파일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6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 2007년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7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 쪽지에는 ‘유정복(인천시장) 3억, 홍문종(새누리당 의원) 2억, 홍준표(경남지사) 1억, (서병수) 부산시장 2억, 이완

구(국무총리), 이병기(청와대 비서실장)’라고 적혀 있다. 이들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중전 경남기업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메모가 발견되면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성완중의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보수층에선 분위기가 그렇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정 사상 조유의 뇌물사건’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총공세를 퍼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당사자들도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적당히 남기려 했다가는 현재 알고 있는 국민적 의혹이 박 대통령에게 옮겨 붙을 수도 있다. 검찰이 자충수를 둔다면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수밖에 없다.

현대판 ‘염전 노예’ 보호 대책 허울 뿐이었다

지난해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다들 기억할 것이다.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끌고 가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은 물론 임금착취까지 해 온 사건이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던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섬에서 구출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노예로 일했던 섬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현대판 ‘염전 노예’ 실태가 알려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신안 지역 염전과 축사·수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 수색 끝에 임금 체불·갑근 등의 인권 침해를 입은 63명을 찾아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중 21명이 다시 염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당시 ‘직업훈련을 거쳐 취업을 앞선하겠다’는 전남도가 말이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장애인이 피해자들을 장애인 전문시설이 아닌 노숙인 재활시설에 보낸 것 자체가 문제였다. 전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정

원이 이미 모두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 기억할 것이다.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끌고 가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은 물론 임금착취까지 해 온 사건이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던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섬에서 구출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놀랍게도 그들 중 상당수가 노예로 일했던 섬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전남도는 당시 등록장애인의 경우 직업훈련 뒤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취업 알선을 협의했지만 한 건도 시행하지 못했다. 결국 상당수 피해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수개월째 노숙인 시설에 머무르다 다시 ‘염전행’을 택하게 된 것이다.

“‘염전 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범부무 등의 업무보고에서 지시한 말이다. 취약층에 대한 돌봄을 가족의 몫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소한의 자활책 등 구체적인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권옹호, 말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

無 等 鼓

지난 2005년 10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외곽도시(방리유·banlieue)인 ‘클리시 수 부아’의 한 공터에서 오후 늦게까지 공놀이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아프리카 이민자 2세 청소년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을 발견했다.

허기진 배를 조금이라도 빨리 채우려던 청소년들은 으레 반군 하는 경찰검문을 피하기 위해 일제히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 가운데 지에드(17)와 바누(15) 두 명의 소년은 프랑스전력공사 송전소 쪽으로 향했고, 이들은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2.5m 높이의 송전소

소년들의 죽음으로 촉발된 방리유 사태는 무차별 방화와 극단적 폭력으로 치달았다. 소요는 디종을 시작으로 지방 도시로까지 번졌으며 툴루즈와 아프리카 이민자 2세 청소년들은 멀리서 다가오는 경찰을 발견했다. 급기야는 파리 시내에서도 30여 대의 자동차가 불에 탔다. 프랑스 정부는 본토에서는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금까지도 당시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을 정도다.

9년 전, 파리의 방치된 외곽지역에서 거주하는 이민자들에게 묻게 했던 차별과 반군은 지금이 시각 우리나라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한국인과 재혼한 어머니와 같이 살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들 소년을 용의자로 보고 검문을 하려 했을 뿐 주권전은 없었다”는 경찰의 주장만을 보도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주변에서 절도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사회적 차별과 빈곤에 분노한 방리유 젊은이들은 15대의 자동차에 불을 질렀다. 이주민 정책 실패의 대안으로 해결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서비스인만큼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정착되어야 한다.

방리유 사태

이제는 간호 패러다임을 치료중심에서 돌봄까지 포함하는 전인간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모든 의료직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하며



허 정 철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친의 간병을 도맡아 할 여력이 되지 못해 처음에는 형제끼리 순번을 정해 간병을 했었다고 한다. 그러다 입원치료가 장기화되면서 가족들도 점점 지쳐 간병에 소홀해지고, 특히 장남에 대한 동생들의 기대와 불만, 그로인한 형제간의 세운함으로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같아 많이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그 자리를 일어나며 “간 병에 효자였다”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급속한 인구고령화, 부모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 간병이 어려워지면서 입원 환자의 다수가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지출하게 될 간병비용은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사회적 제도 대두되게 되었다.

2013년 11월 국회정책토론회에서 고려대의대 안형식교수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환자 1인당 간병비용 발생액은 연간 275만원으로,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입원비 부담분 46만2000원 보다 5배 이상 많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간병인 등 보호자가 필요함에도 서비스 받지 못하는 환자 전체의 67.6%나 된다고 발표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 인력을 확충하여 간병을 입원서비스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새로운 간호-

간병 서비스) 시범사업을 2013년 7월부터 전국 13개 병원(민간 9개소, 공공 4개소)에서 시작했다. 이어, 2014년에는 전국 28개 병원(민간 9개소, 공공 19개소)에서 실시하였고, 올해 1월부터는 국고지원방식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대형병원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14.2월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 2014.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포괄간호서비스’는 의료기관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에 대하여 전문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므로 환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 뿐 아니라,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출하게 되는 하루 8만원 상당의 간병비 대신에 ‘포괄간호병동 입원료(종합병원 6인실 기준 하루 3800원 ~ 7400원 상당)’만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그동안 큰 짐으로 여겨졌던 간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2014년 11월 발표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정교수 연구팀의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연구 결과 자료에 따르면, 환자 1인당 간호 제공 시간이 일반병동 환자 비해 1.7배 증가하였고, 유망 발생률은 75%, 낙상사고는 19%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열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제 크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